

## 한·중 관계의 발전추세와 전망: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위한 시론(試論)\*

조영남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이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의 한·중 관계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 관계의 과거 발전추세와 과제를 분석한다. 또한, 정치, 군사·안보, 사회 등 주요 영역에서 나타나는 한·중 관계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제시한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교류 주체와 영역의 급속한 확대, 영역별 불균등 발전의 심화, 공식규정과 실제관계의 괴리, 양국 간의 국력격차와 비대칭성의 확대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래의 한·중 관계는 북·중동맹과 남북관계, 한·미동맹과 중국의 부상 대응,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 충돌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관여정책, 위험분산 전략, 동(東)아시아 다자주의 정책으로 구성된 '정책 삼중주'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세 정책 모두와 밀접히 연결되고 각각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삼중주의 보이지 않는 중심이다.

주제어: 한·중 관계, 남북관계, 북·중동맹, 한·미동맹, 관여정책, 위험분산 전략, 다자주의, 정책 삼중주

\* 초고를 읽고 좋은 논평을 해주신 김태호, 이희옥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중 관계 통계를 잘 정리해준 김민기, 조아라 조교에게도 감사한다. 이 논문은 고(故) 구영록 선생님의 10주기를 추모하여 작성된 것이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I. 서 론

한국·중국 관계(한·중 관계)는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sup>1</sup> 경제교류를 보면, 무역액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10년 1,884억 달러로 29배나 증가했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통상국이 되었다. 사회·인적 교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상호 방문객 수를 보면, 1992년 13만 명에서 2010년 596만 명으로 46배나 증가했다. 양국 간 정기 비행편수도 2009년에는 52개 노선에서 매주 837회(매일 120회)나 운행되었다(외교통상부, 2010: 225, 277, 333). 유학생 교류도 급증하여, 2009년 재중(在中) 한국유학생은 약 6만 7천 명으로 전체 재중 외국유학생의 1위(27%), 재한(在韓) 중국유학생도 약 5만 5천 명으로 전체 재한 외국유학생의 1위(72.5%)를 차지했다.<sup>2</sup>

그런데 군사·안보 분야를 보면 한·중관계가 순탄하게 발전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드러졌는데, 특히 2010년은 한·중 간에 심각한 ‘전략적 불신’이 나타났던 한 해로 평가된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동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을 둘러싼 양국의 대응은 이를 잘 보여준다. 천안함 사건에서 중국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국제사회의 조사 결과를 믿지 않았고, 유엔(UN) 안보리에서도 북한을 옹호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중국은 한국 국민의 사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남북한 모두의 자제와 평화적 문제 해결만을 촉구했다. 동시에 중국은 서해와 남해에서 진행

- 
1. 최근의 한·중 관계에 대한 검토는 김태호(2009); 이동률(2006); 서진영(2006); 김재철(2006) 참고
  2. 참고로, 2009년 중국·일본 무역액은 2,978억 달러, 양국 방문객은 약 570만 명, 왕복 비행 편수는 매주 약 730회였다. 한편, 2009년 중국·미국 무역액은 3,800억 달러, 양국 방문객은 약 300만 명, 왕복 비행 편수는 매주 약 110회였다. 유학생의 경우, 2009년 재미(在美) 중국유학생은 약 12만 명, 재중 미국유학생은 약 2만 명이었던(胡正躍, 2011; 楊潔麗, 2011; 김태호, 2009: 39).

된 한·미 군사훈련을 단순한 대북 억제력 행사가 아니라 대중(對中) 포위 전략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렇게 되면서 한·중 간에 경제관계는 발전하지만 정치·안보관계는 후퇴하는 ‘경열정냉’(經熱政冷) 현상이 출현했다.

그렇다면 향후 한·중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중 간에 전략적 불신이 계속 심화되어 2010년에 나타났던 ‘경열정냉’의 관계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미래의 한·중 관계는 과거 및 현재의 중·일 관계처럼 될 것이다. 즉, 한·중 관계는 경제적으로는 협력하지만 군사·안보적으로는 대립하는 갈등 위주의 관계로 고착될 수 있다. 반대로 양국 간에 전략적 불신이 해소된다면 미래의 한·중 관계는 경제와 정치가 동시에 발전하는 ‘경열정열’(經熱政熱)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는 설명이 필요 없다. 현시점에서 한·중 관계가 어느 쪽으로 발전할 것인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국제관계, 한·중의 국내상황, 한·중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한·중 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세 가지 사항에 주의할 것이다. 첫째는 중국의 부상과 국제환경의 변화이다. 향후 세계질서와 아시아 지역질서는 지역강대국에서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의해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한·중 관계의 장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한·중 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관건적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이전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조영남, 2010a). 둘째는 경험적 사실이다. 한·중 관계의 미래는 과거 및 현재의 양국관계와 연결된다. 그래서 한·중 관계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는 수교 이후의 양국관계이다. 셋째는 한국적 관점이다. 한·중 관계의 미래를 분석하는 것은, 양국관계가 한국의 국익 증진과 아시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도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분석할 것이다. 첫째는 한·중 관계의 추세와 과제이다. 여기서는 지난 20년 동안 한·중 관계가 보여준 몇

가지 추세를 찾아내고, 이것이 한국에게 주는 함의와 과제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는 한·중 관계의 주요 쟁점이다. 여기서는 군사·안보 면에서 양국의 핵심 현안인 북한문제와 한·미동맹이 중점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사회·문화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국 간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문제도 검토될 것이다. 셋째는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이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정리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다음을 주장할 것이다. 먼저, 수교 이후 지난 20년의 한·중 관계에서는 교류 주체와 영역의 급속한 확대, 영역별 불균등 발전의 심화, 공식규정과 실제관계의 괴리, 양국 간의 국력격차와 비대칭성의 확대라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향후의 한·중 관계는 세 가지 현안, 즉 북·중동맹과 남북관계, 한·미동맹과 중국의 부상 대응,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 충돌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관여, 위험분산, 동(東)아시아 다자주의 정책으로 구성된 대(對) 중국 ‘정책 삼중주’(policy trio)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세 정책 모두와 밀접히 연결되고 동시에 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게중심이다.

## II. 한·중 관계의 추세와 장래 과제

지난 20년의 한·중 관계에서는 크게 네 가지 추세가 나타났다. 한·중 관계의 영역 및 주체의 급속한 확대와 이에 따른 양국관계의 복잡화, 주요 영역 간 불균등 발전의 심화, 한·중 관계의 공식규정과 실제 간의 불일치 심화, 한·중 간의 국력격차와 비대칭성(asymmetry) 확대가 그것이다.

### 1. 한·중 간 교류 주체와 영역의 급속한 확대

한·중 관계는 교류 주체가 다원화되고 관계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이 같은 양국관계의 발전은 다른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한·중 간의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역사적 친근함 등이 큰 배경이 되었다(서진영, 2006: 370-379; 형혁규, 2008/2009). 그 결과 한·중 관계는 수교 초기에 주로 경제영역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단순한 관계에서, 현재는 전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먼저, 한·중 관계의 교류 주체가 급속히 다원화되었다. 1992년 수교 초기 한·중 관계는 정부와 기업이 주도했다. 그런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여기에 더해 개인과 다양한 사회조직이 중요한 주체로 등장했다. 이는 한·중 간의 상호 방문객과 유학생 수의 급속한 증가가 잘 보여준다. 또한, 한·중 관계의 교류 영역과 내용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수교 초기에는 경제(무역·투자)와 북한문제가 양국관계의 중심이었다. 한국은 북한문제 해결에 중국이 협조해 줄 것과 중국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주목했고,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톈안먼(天安門) 사건 이후의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서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Lee, 1996: 99-131; Chung, 2007: 56-74). 이에 비해, 현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한·중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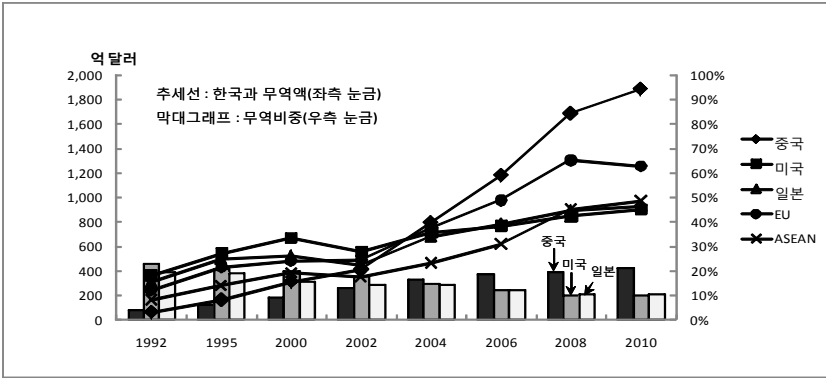
한·중 관계의 급격한 주체 다원화와 영역 확대는 부정적 요소를 증가시켰다. 한·중 간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보다 커졌는데 비해, 양국의 위기관리 체제와 능력은 이런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은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 결과 양국관계는 악화와 개선이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양국관계의 현안 문제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예기치 않은 갈등과 충돌을 야기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한·중 관계의 영역별 불균등 발전

지난 20년의 한·중 관계는 영역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발전했다는 특징이 있다. 한마디로, 양국관계는 경제>사회>정치>안보 순으로 발전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났다(서진영, 2006: 383-392; 김재철, 2006: 226-237; 김태호, 2009: 34-42; 형혁규, 2008/2009: 52-60). 이와 같은 불균등 발전은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미 관계와 중·일 관계가 대표적이다. 즉, 이들 국가 간의 경제·사회 교류는 국교 정상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군사관계는 발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중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문제와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전략적 불신이 가중되면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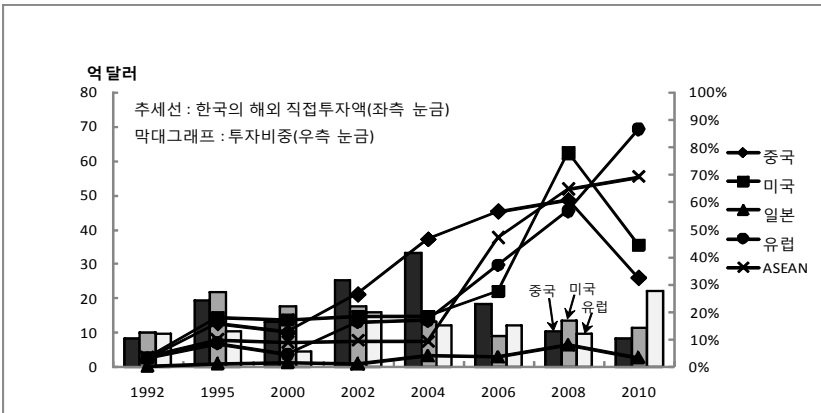
먼저, 한·중 경제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했다. 이 중에서 무역은 규모와 비중 모두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1992년 한·중 무역은 64억 달러로 한국무역 전체의 4%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1,884억 달러로 한국무역의 21.1%를 차지했다. 반대로 한·미 및 한·일무역은 규모와 비중 면에서 중요성이 감소했다. 1992년 한·미무역은 364억 달러로 한국무역에서 23%를 차지했지만, 2010년에는 902억 달러로 그 비중이 10.1%로 떨어졌다. 한·일무역도 비슷하여, 1992년 311억 달러로 한국무역에서 19.6%를 차지했지만, 2010년에는 925억 달러로 그 비중이 10.4%에 불과했다(그림 1).

한편, 한국의 중국 직접투자(FDI)는 무역처럼 일직선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중국투자는 2004년에 정점(한국 해외투자 총규모의 41.5%)에 도달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0년에는 그 비중이 10.4%로 축소되었다. 반면 2010년 한국의 미국투자 비중은 14.3%, 유럽투자 비중은 27.9%, 동남아(ASEAN) 투자 비중은 12.5%였다(그림 2). 다시 말해, 투자 비중 면에서 보면 2010년 중국은 한국의 제4위의 투자 대상국에 불과하다. 이것이 일시적인 추세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일지는 시간을 좀더 두고 보아야 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에는 중국이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었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그림 1. 한국과 주요국가 간의 무역추세(한국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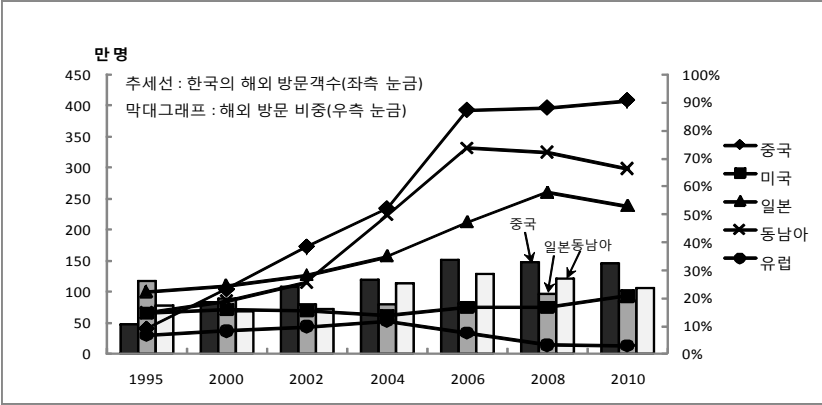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그림 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추세(신고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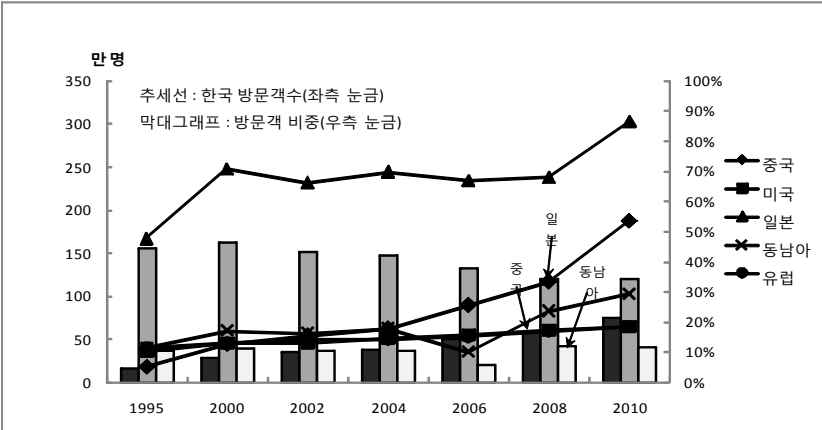
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인적 교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호 방문객 수는 1995년 40만 명에서 2010년 596만 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한국인의 중국방문은 빠르게 증가해서,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가 되었다(그림 3.1). 반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서는 여전히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을 방문한 일본



주: 2006년 해외여행객의 출입국 카드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해외여행객 목적지 확인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수집한 해외 통계자료에 기초. 유럽은 독일의 통계 자료만 활용 가능.  
 자료: 한국관광공사(주요국 한국인 출입통계).

그림 3.1. 한국인의 해외방문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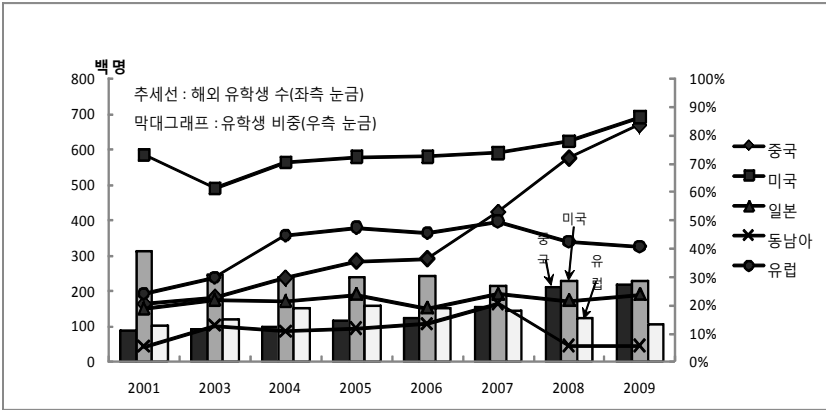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주요국 한국인 출입통계).

그림 3.2. 외국인의 한국방문 추세

인은 302만 명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고, 중국인은 188만 명으로 전체의 21.3%를 차지했다(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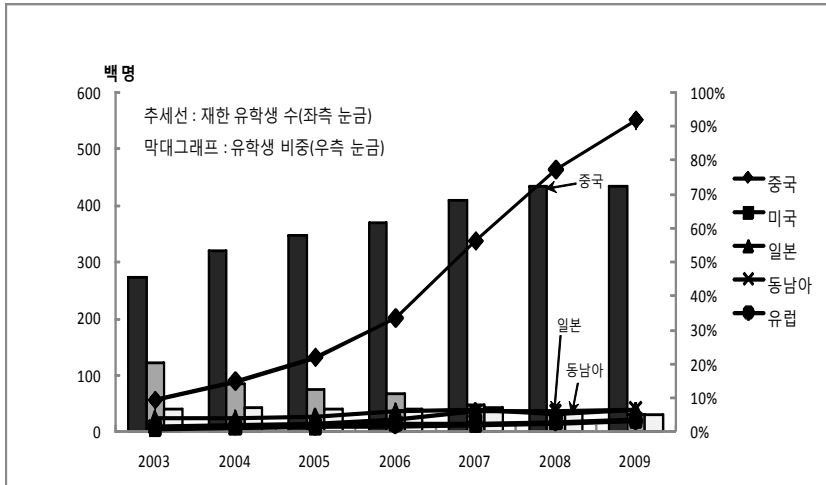
유학생 교류도 급증했다. 2001년 재중 한국유학생은 약 1만 6천 명으로 전체 재외 한국유학생의 10.9%였는데, 2009년에는 약 6만 7천 명으로 그 비





주: 재외 한국유학생 통계는 2001년부터 제공되나, 재한 외국유학생 통계는 2003년부터 제공.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그림 4.1. 한국인의 해외유학 추세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재한 외국유학생 통계의 원(源) 출처는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4.2. 외국인의 한국유학 추세

중이 27.5%로 높아졌다. 물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2010년 재미 한국유학생은 약 6만 9천 명으로 전체 해외 한국유학생의 28.4%를 차지했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를 보면, 미국의 우위는 곧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1). 반면, 재한 외국유학생 중에서는 중국유학생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2010년의 경우, 총 약 7만 6천 명의 재한 외국유학생 중 중국학생은 5만 5천 명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그림 4.2).

한·중 정치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4년 동안 양국은 모두 19회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양국이 매년 평균 1.4회의 정상회담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기간에 양국은 모두 57회(매년 4회)의 의회 간 교류와 71회(매년 5회)의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런 사실은 양국이 주요 현안을 놓고 빈번하게 접촉했음을 보여준다. 한·중 간 조약체결 현황도 양국 정치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준다. 1992년 수교 이후 2008년까지 한·중은 모두 53건의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1991년 수교한 러시아와 한국이 같은 기간에 체결한 28건의 조약 수보다 약 두 배가 많은 것이다(형혁규, 2008/2009: 52-57).

이에 비해 한·중 간 군사·안보관계는, 양국 간 다른 영역의 발전이나 중국과 타국 간의 관계 발전과 비교할 때 매우 더디게 발전했다. 한마디로 말해, 한·중 간의 군사·교류는 현재 ‘협력단계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양국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의 상호방문, 양국 합정과 군용항공기의 상호방문, 국방대학 및 사관학교 학생들의 상호방문 등이 포함된다(하도형, 2008: 3-35; 김태호, 2009: 40-41).

한·중 간 군사·안보 관계가 이처럼 더디게 발전한 것은 중국군의 특수성이나 중국 내 관료·행정적 요인 등과 같은 내부요인과, 북·중 관계와 한·미관계라는 외부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군사교류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고려와 한·미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소극적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이 타이완(臺灣)과의 군사교류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양국 장교의 장기 위탁교육과 같은 인적 교류조차도 반대하고 있다(하도형, 2008: 23-28; 김태호, 2009: 41; 이동률, 2006: 260).

한·중 관계의 불균등 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한·중 관계의 버팀목인 경제관계도 다른 관계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일본 수상이 집권하면서 중·일 간에 군사·안보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도 악화되고, 이것이 다시 양국의 경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역내 민주국가와의 연대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 상호간의 호감도도 급속히 하락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일 간 경제교류도 위축될 조짐이 보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에 등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신뢰를 동반하지 않는 한·중 관계는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다. 2010년 한·중 간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갈등과 이에 따른 양국 국민 간의 비호감도 증가는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문제는 향후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간에는 이견과 대립이 반복될 것이다. 미·중 간의 군사·안보 대립과 갈등도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나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를 둘러싸고도 한·중 간에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한·중 간에 군사·안보 갈등이 지속된다면 한·중 관계는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기존의 성과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은 양국관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단기적·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경제관계와 사회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상호보완적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win-win) 경제관계와, 상호 우호적인 사회관계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정치·안보 영역에서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 간 상호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 3. 한·중 관계의 공식규정과 실제의 괴리

한·중 관계에 대한 공식 규정은 네 번의 변화를 겪었다. 1992년 수교 당시 한·중 관계는 ‘우호협력관계’(友好合作關係)로 규정되었고, 이것이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面向21世紀合作夥伴關係)로 격상되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에서는 한·중 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全面合作夥伴關係)로 다시 격상되었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에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戰略的合作夥伴關係)가 합의되었다(형혁규, 2008/2009: 50).

한·중 관계의 격상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한다. 하나는 1998년에 한·중 관계가 ‘동반자관계’(partnership)로 규정된 점이다. 이는 양국관계를 기존의 경제협력 위주에서 정치·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시키자는 의지의 표현이다(이동률, 2006: 234). 다른 하나는 2008년에 한·중 관계가 ‘전략적 관계’(strategic relationship)로 규정된 점이다. 이는 협력의 범위를 양자차원에서 지역·세계 차원으로 확대하고, 협력 분야도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전 분야로 확대하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다(외교통상부, 2010: 225). 실제로 2007년 4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는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는 양자 간 및 역내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에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중국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동률, 2006: 241). 한국이 이런 판단에 동의함으로써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설정되었다.

한·중 관계에 대한 공식 규정이 몇 차례에 걸쳐 격상된 것은 양국의 정치 관계가 발전해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공식관계의 격상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이런 공식 규정은 한·중 간의 실제 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권의 외교업적을 위한 수사(修辭)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중 관계의 공식 규정이 5년이라는 한국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격상된 사실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매 5년마다 정권 차원에서 공식관계의 격상을 추진했고, 중국도 이를 지지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말로만’ 격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았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Lee, 2010: 292). 참고로,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주요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체결해왔기 때문에(현재까지 20여 개 국가·지역과 체결),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체결은 일관된 외교정책의 추진 결과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공식 규정이 실제 관계와 괴리되고, 이로 인해 한·중 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체결 이후, 한·중 양국의 서로에 대한 ‘전략적 기대’는 상승하는데 비해, 실제관계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국 간에 ‘전략적 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9년과 2010년에 현실화되었다. 즉, 2008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체결 이후, 한·중 간에는 전략적 불신이 더욱 고조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동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한·미 군사 훈련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을 둘러싼 한·중 간의 상호 불신과 비판 증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향후 바람직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제 내용을 수반하지 않는 수사적 차원의 관계 격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적인 관계 격상을 실제관계의 발전으로 확대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정책을 수립하거나, 혹은 정권의 외교 업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대신 양국 관계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관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실천이 필요하다. 초(超)정권적이고 초당파적으로 중국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 4. 한·중 간의 국력격차와 비대칭성 확대

중국의 부상과 함께 경제력과 군사력 등 물리력에서 한·중 간 국력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왔고, 향후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문제는 한·중 간 국력격차가 확대되면서 양국 국민 간의 ‘인식격차’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될 것이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시와 불만도 확대될 것이다. 양국이 국력격차에 이은 인식격차의 확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양국관계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경제와 안보 분야 모두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경계하는 심리가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하면 조공체제(朝貢體制)가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한국 사회에는 존재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질서 형성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변국가에 대한 중국의 배려 부족이나 영토·영해 문제와 관련된 공세적 외교행태가 나타나면, 한국에서는 이를 중화주의(中華主義)의 발로로 해석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다. 2004년과 2006년 동북공정(東北工程)과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한국이 보인 반응은 이를 잘 보여준다(이장원·홍우택, 2008; 이희욱, 2008; Chung, 2009).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중국정책과 관련하여 현실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주장이 더욱 커다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표적이다.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면서 ‘통상의 다각화’를 위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시장과,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시장을 최대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한·미 간, 한·유럽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국가 및 지역과 우선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는 통상정책으로 구체화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이것이 완료된 이후에나 체결될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에 대한 포위정책으로 간주하여 한국의 현실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중국정책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국력증진과 국제지위 제고에 따라 중국인의 자부심이 강화되고, 이는 한류(韓流) 등 한국 문화의 중국내 영향력 증가와 한국의 ‘반(反)중국 정서’ 확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런 경향은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신세대, 즉

소위 ‘바링허우(八零後)’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2005년 이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한류에 대한 대규모 비판 흐름인 ‘항(抗)한류’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반한(反韓) 감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윤경우, 2008/2009).

물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중견국가(middle power)이다(김치욱, 2009(a); 2009(b)). 그래서 한국은 지역주의 발전이나 지역제도 창출 등에서 일정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로 각 대륙의 중요한 중견국가들은 지역통합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최영중, 2009). 이런 면에서 한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수성으로 한국은 이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먼저, 분단국가로서 한국은 상당한 정도의 국력을 북한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반면 중국이 한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 국력의 열세 외에도 분단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수세적 위치에 있고, 이것이 양국관계에서 한국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 III. 한·중 관계의 주요 쟁점

한·중 간에는 다양한 현안이 있다(조영남, 2006: 259-261; 김태호, 2009: 42-48; 이동률, 2006: 246-254; 서진영, 2006: 392-396; Lee, 2010: 292-296). 이 중에서 한·중 관계의 현재 및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북·중동맹과 남북관계이고, 둘째는 한·미동맹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이며, 셋째는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이다.

## 1. 북·중동맹과 남북관계

단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북·중동맹과 남북관계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상위의 외교목표, 즉 국내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양대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북한정권 유지와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부수적 목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균형외교 정책을 추진했고, 북핵문제 등의 주요 현안에도 적극 개입했다(조영남, 2006: 257-258). 이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단기간 내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원동욱·김재관, 2010; 이희옥, 2009, 2006; 문홍호, 2009; 신상진, 2006).

중국은 한반도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중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주로 안보이익을 위해, 부수적으로 외교이익을 위해 북한을 지원한다. 안보이익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과,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대치 방지(소위 ‘원충지대론’) 등이다. 중국에게 북한의 안보적 중요성은 현재 및 향후에 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반(反)중국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외교이익은 6자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미·일과의 관계에서 ‘북한 카드’를 중요한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북·중동맹이 지속되고 중국이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한다면, 또한 만약 한국이 대북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추진한다면 한·중 간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한국이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추진한다면 중국과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대신에 협력과 공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중 관계, 후자의 예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중 관계를 들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양국 간에는 갈등·대립의 관계와 협력·공조의 관계가 반복하여 출현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국력이 증강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북한은 이미 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Thompson, 2011). 북한의 중국 무역의존도(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북·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를 보면, 2002년 24.9%에서 시작하여 2005년 52.7%로 처음으로 50%를 넘는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09년에는 78.5%에 이르렀다. 2010년에도 양국 간 무역액은 34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북중무역」, 2011). 북한의 전략물자 도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이후 북한은 원유의 100%, 식량의 40~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최명해, 2010). 북한이 유치한 해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2003년 북한이 유치한 1억 5,800만 달러 중에서 중국 투자액은 100만 달러로 그 비중은 0.7%에 불과했다.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북한이 유치한 외자총액(4,400만 달러) 중에서 중국(4,123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3.7%가 되었다(조명철, 2010). 2008년 6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방북과,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수십억 달러가 넘는 등 급증하고 있다(「중, 북 나선특구」, 2011).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과 미·일이 대북 봉쇄정책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중국 의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제약요소가 될 것은 분명하다. 즉, 한국은 경제지원을 정책수단(leverage)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의 실제 효과는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와 함께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점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만약 중국이 한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크게 실망할 것이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중국만 비난한다

고 생각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한·중관계의 악화이다. 2010년 한·중 갈등은 이것의 단초를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북 봉쇄정책은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한 주체인 북한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및 향후에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이 미·일의 협조를 얻어 봉쇄정책을 지속하더라도 중국의 대북지원 확대를 기대하는 정책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지역 및 세계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관여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정리하면, 한국의 대북 관여정책은 중국의 적극적 지지와 최소한 미·일의 소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인 반면, 봉쇄정책은 중국의 적극적 반대와 미·일의 유동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다.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여정책만이 주변국가와 북한의 지지를 얻는 정책이 될 것이다.

## 2. 한·미동맹과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탈냉전기 중국에게 가장 커다란 안보위협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및 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도 여기에 포함되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위협적인 것은 미·일동맹이다(조영남, 2009: 246-259). 미·일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반중국 안보협력’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지도부와 다수의 중국학자들은 그렇다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주로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점이 두어졌고, 향후 단기간 내에 이런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Denmark and Hosford, 2010). 그런데 2005년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이 한반도에서 아시아 및 세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면서,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동맹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미국의 반중국 안보연합의 일환으로 성격과 역할이 조정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와 역할 확대에 더해,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미국이 이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력이 쇠퇴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군사비를 축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 유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점점 제한된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인의 전쟁 피로와 고립주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일이 주도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Denmark and Hosford, 2010; Cronin, Kliman and Denmark, 2010; Study Group, 2010).

이런 미국의 요구에 일본은 적극 호응하고, 한국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간의 직접적인 안보협력이 시작되고 향후에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역사갈등과 해양분쟁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매우 우려한다. 그래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호주·인도 등 다른 민주국가와의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조영남, 2010a: 57-58; 손열, 2010).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 내에서도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Kim, 2008). 최근에는 이것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 한·미 군사훈련과 미·일 군사훈련에 한국군 및 일본군 장교가 최초로 상호 참관한 것, 한·미·일 해군이 동년 10월에 부산지역에서 PSI(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합동훈련을 최초로 실시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논의된 것은 또 다른 사례이다(「한일 국방장관」, 2011; “Japan and South Korea”, 2011).

이처럼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은 매우 경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삼국 안보협력이 타이완 해협이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해양분쟁을 겨냥하여 전개될 경우,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동맹국 및 안보협력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부상을 봉쇄하려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은 한국도 중국봉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계할 할 것이다. 중국의 경계는 군사력 증강의 가속화, 북·중동맹의 강화, 중·러 안보협력의 강화로 구체화될 것이다. 결국,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동아시아에는 ‘해양세력’(한·미·일)을 한편으로 하고, ‘대륙세력’(북·중·러)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냉전시대의 양대진영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한반도는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 한·미동맹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위협이 존재하고,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이동률, 2006: 259-262).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처럼 성격과 역할이 변화되어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중국 안보연합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존재 그 자체가 한·중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같은 이치로 북·중동맹 그 자체가 한·중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한·중이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 3. 한·중 간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 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현안으로는 규범 및 가치관의 대립이 있다.<sup>3</sup> 1990년대에는 이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경제와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양국 관계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중 관계가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발전하면서 규범 및 가치관의 갈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4년과 2006년에

3. 이하의 내용은 조영남(2010b)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고구려사 왜곡으로 한·중은 예기치 못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많은 한·중 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수교 이후 10여 년 동안 쌓았던 양국 간 신뢰와 우호관계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평가한다.

한·중 간에 규범 및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정치·외교 영역에서는 민주와 인권, 법치(rule of law)가 있고,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역사인식, 중화문명과 한류가 있다. 이 중에서 민간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사회·문화 영역에서 나타나는 규범 및 가치관의 갈등이다. 단오제(端午祭), 인쇄술, 신화(神話), 혼천의(渾天儀) 등을 둘러싼 각종 ‘원조논쟁’이 양국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대되면서 신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따라 최근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비호감도(非好感度)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BBC·EAI 국제현안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국인은 40%인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한국인은 50%였다(미국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이 49%, 부정이 36%였다)(동아시아연구원, 2008). 이는 2004년 동북공정 사건 이전에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았던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2010년 11월에 발표된 동북아역사재단의 한·중·일 역사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한·중 관계 전망은 “좋아질 것”이 2009년 60.3%에서 2010년 49.4%로 10.9%나 하락했고, “나빠질 것”은 2009년 11.5%에서 2010년 17.4%로 5.9%가 증가했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의 한·중 관계 전망도 유사하다. 즉 “좋아질 것”이 2009년 61.0%에서 2010년 46.0%로 15% 하락했고, “나빠질 것”은 2009년 4.8%에서 2010년 17%로 12.2%가 증가했다(동북아역사재단, 2010).

중국의 주요국가 호감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중국의 한·중·일 유력 일간지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 중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한다고 선택한 중국인의 비율은 2009년 3.9%에서 2010년 1.4%로 크게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선호도 순위에서도 주요 10개국 중 2009년 6위에서 2010년 9위로 떨어졌다. 참고로 2010년 조사에서 나타난 중국인의 외국 호감도 순위는 미국 > 프랑스 > 호주 > 스웨덴 > 캐나다 > 영국 > 일본 > 싱가포르 > 한국 > 독

일 순이다(「中國人看世界」, 2011).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은 최근 들어 심각한 역사분쟁과 영해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한국을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한·중 양국의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배경으로 한국 내에는 중화주의의 재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애국주의를 넘어서선 국수주의가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한국의 경계심이 높아지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통해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한·중 간에는 경제 영역에서도 일정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무역불균형(즉, 한국의 흑자 확대), 중국의 경제관련 법률제도 미비와 한국기업의 피해(예를 들어, 2008년의 한국기업 ‘야반도주’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둘러싼 경쟁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중 양자관계보다는 지역적·세계적 차원의 다자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국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역불균형 심화와 경쟁 강화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 IV.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

한국의 중국정책은 세 가지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조영남, 2009b: 15-17). 먼저, 한국의 국익 증대가 중국정책의 기본 전제이며 목표이다. 타국처럼 한국도 주권과 영토 수호, 민주적 가치와 제도 유지, 경제발전과 번영, 국제위상 제고와 같은 국익을 추구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특수한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첫째,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한국

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간 정치·안보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일 관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정치·안보관계의 발전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관계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둘째, 군사·안보 면에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불확정성을 최소화한다. 중국의 군사력은 크게 증강되었지만, 국방비 사용과 전략 의도는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반대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실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중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중국정책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안보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 지역과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역내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정책은 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노력에 호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안보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만 한국의 정책은 역내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정책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중국정책은 지역관점에서 지역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국정책은 한·중 간의 국력격차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향후 한·중 관계는 과거 및 현재의 한·미 관계처럼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등 각 방면에서 비대칭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객관적 현실이고 한국의 중국정책은 이런 현실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이 점이 미·일의 중국정책이 한국의 중국정책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미·일이 당면한 과제와 한국이 당면한 과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대외전략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 가용한 기존자원의 동원과 새로운 외교자원의 개발, 현실성 있는 정책의 입안과 추진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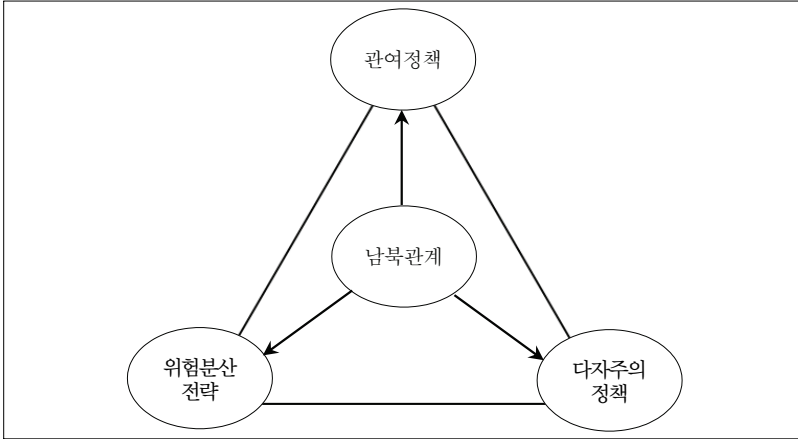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 ‘정책 삼중주’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의 중국정책은 관여(engagement), 위험분산(hedging), 동아시아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등 세 가지 정책이 밀접히 연결된 ‘정책 삼중주’를 이루어야 한다. 먼저, 세 정책은 같이 추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느 하나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세 정책은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세 정책 중에서 어느 한 정책이 중시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정책 삼중주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 중심은 남북관계이다. 남북관계는 세 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은 중국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관여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 연구가 보여주듯이, 한국은 그 동안 중국 관여정책을 추진했고, 한·중 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Cha, 1999). 이를 계승하여 향후에도 관여정책을 중국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관여정책의 목표는 한·중 양자관계의 안정화이다. 즉, 관여정책을 통해 한·중 관계를 건실하게 발전시켜, 미·중 관계와 같은 강대국관계의 악화, 북한문제 등 지역현안의 돌출, 한·중 신세대 간의 민족주의 충돌 등 양국 현안의 등장이 양국관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정



책방향은 한·중 관계의 견인차이며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여기에 사회·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민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관여정책에서는 또한 정치·안보 영역에서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한·중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불균등한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군사·안보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북한문제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 간 전략적 불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양국 관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단기적·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문제와 한·미동맹과 관련된 한국의 방침을 중국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에는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국익’(core interests: 예를 들어, 티베트, 신장(新疆), 타이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려하는 자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근거를 갖고 비판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기존 정책과 태도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부상에 군사·안보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험분산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sup>4</sup> 여기에는 한·미동맹의 지속과 한·미·일의 선택적 안보협력(예를 들어, 인도주의적 차원의 해상구조 훈련)이 포함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反)중국 안보연합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미동맹의 지속은 동맹의 범위와 한국의 역할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의 범위는 한반도가 중심이라는 점, 즉 한·미동맹은 대북억제가 목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군사역할 확대는, 평시와 전시(戰時) 모두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군사행위

4. 위험분산 전략의 의미는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즉, 위험분산은 주로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한 국가가 불확실한 국제 상황에서 다양한 위협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복합적인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또한, 위험분산은 경성(hard) 혹은 연성(soft) 균형정책, 속박(binding) 또는 통합(integrating)정책 등을 포함하며, 관여정책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조영남, 2010a: 55).

에서만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군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군사활동,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일의 군사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조정, 한·미·일의 선택적 안보협력이 반중국 군사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고, 한국은 이를 기초로 중국을 설득하고 지지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위협분산 전략은 단순히 군사적인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과 외적균형(external balancing)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자체 군사력 증강(즉, 내적균형)이나, 한·미동맹을 통한 군사력 강화(즉, 외적균형)는 위협분산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것이 위협분산 전략의 전체는 아니다. 위협분산에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국가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다자간 협력기제의 구축과 안보협력의 제도화, 지역주의 규범의 형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행위의 규제 등도 포함된다. 이런 면에서 위협분산은 냉전시기의 세력균형과는 다르다. 또한, 이 때문에 위협분산은 ‘반(反)중국’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의 위협분산 전략에 호응할 수 있다. 중국이 6자회담의 정례화 등 역내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기제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조영남, 2009a: 252-253).

한국은 중국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동아시아 다자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김재철, 2006: 269; 이동률, 2006: 271-272).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중국정책은 좋은 본보기이다. 여기에는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대(大) 다자주의, 동북아시아나 특정 지역 및 국가만을 포괄하는 소(小) 다자주의 정책 모두가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기존 조직의 발전과 새로운 조직의 형성, 전통적 안보기제와 비전통적 안보기제의 형성과 발전 모두가 포함된다. 대 다자주의의 사례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3(한·중·일),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들 수 있다. 소 다자주의의 사례로는 6자회담, 한·중·일 정상회의, 한·미·일 외교안보회의 등을 들 수 있다.

다자주의 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선, 위협분산 전략

처럼 다자주의 정책도 ‘반중국’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한·중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수 있다. 다만 동아시아 다자주의가 세계강대국으로서 중국이 보여줄지도 모르는 패권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국과 주변국가에게 유리하게 수립되고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다자주의 정책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미·중·일·러를 상대로 하는 다자주의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신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태평양 양안 등 다른 지역을 포괄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다자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삼중주에서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책 삼중주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반대로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면 이는 잘 운영될 수 있다. 첫째, 남북관계는 한국의 중국 관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한·중 간에 전략적 불신이 심화된다면 한국의 관여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대북정책이 양국 간의 전략적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북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주변국가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위험분산 전략이 한·중관계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대비하는데도 중요하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이면, 남북한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중도 이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만약 미·중이 대립하면 한·미동맹이 다시 부각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중국 위험분산 전략은 미국의 반중국 안보협력의 일환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미·중이 이로 인해 갈등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관계는 한국의 동아시아 다자주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북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 가

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약 한국이 북한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한국은 지역문제 해결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다자주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정책 삼중주는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상하는 중국에 적절히 대응하고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consensus)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국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미·중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상호 모순되지 않고, 한국은 미·중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두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미·중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중국정책이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초(超)당파적이고 초정권적으로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V. 결 론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양국의 경제관계와 사회·인적 교류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되었고, 정치관계도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했다. 다만 군사·안보관계는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발전이 매우 늦었다. 향후 한·중 관계의 더욱 견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역별 불균등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정치·안보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중 간의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한·중 관계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보았고, 향후에도 한

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한·중 관계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래에 양국관계가 한국의 국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달한 사고’로는 중국의 부상과 국제환경의 변화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주장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야 한·중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자국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 한국을 존중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위협 분산 전략의 일부를 한·중 관계 전체로 확대 적용한 잘못된 견해이다. 또한, 이는 중국의 부상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드러내는 단견(短見)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 상대적 열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논리대로 하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중 간에 전략적 불신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나 지역현안을 놓고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축소된다. 또한, 이로 인해 양국의 경제·사회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내 반한감정의 확대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장애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의 대북 강경정책만이 중국의 대북 압박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미가 대북 강경조치를 취하면 북한정권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중국 압박용으로 미국 전술핵(戰術核)을 한국에 재배치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이런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주장이 맞을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몇 번의 경험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1993년 제1차 북핵위기와 2006년 제1차 북한 핵실험에서 보여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장

기적으로 보면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미의 대북 강경책은 북·중동맹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국 의존을 심화시켜, 결국은 한·미의 대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중국 무역의존도 증가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의 중국 무역의존도 증가는 분명 우려할 사항이다. 한국경제가 특정 국가의 경제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가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통상과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적극 진출하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타이완 경제의 중국 의존 심화를 우려하여 타이완 기업이 동남아로 통상 및 투자를 다각화하도록 유도했던 민진당(民進黨) 천수이벤(陳水扁)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결국 한국이 할 일은 중국시장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과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국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유무(有無)이지 무역의존도의 고저(高低)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중 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는 ‘정책 삼중주’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 관여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위험분산 전략과 동아시아 다자주의 정책이 이를 보조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 정책 삼중주의 추진과정에서 한국의 북한정책과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미·중의 협력 및 지지를 최대화하고 이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경우에만 대 중국 관여, 위험분산, 동아시아 다자주의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북·중 무역 작년 34억 달러, 사상 최대」. 『동아일보』(인터넷판) 2011년 2월 27일. <http://news.donga.com>(검색일: 2011년 1월 28일).
- 「중, 북 나선특구에 20억 달러 투자」. 『중앙일보』(인터넷판) 2011년 1월 7일. <http://article.joinsmsn.com>(검색일: 2011년 1월 7일).
- 「한·일 국방장관 ‘군사협정 체결 공감」. 『한겨레신문』 2011년 1월 11일. <http://www.hani.com.kr>(검색일: 2011년 1월 11일).
- 김재철. 2006.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 김치욱. 2009a. 「국제금융제도 개혁과 증견국가: G20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 회보』 43집 3호. pp. 271-295.
- 김치욱. 2009b. 「국제정치의 분석 단위로서의 증견국가: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49집 1호. pp. 7-36.
- 김태호. 2009. 「한·중 관계의 명(明)과 암(暗): 다층적 맥락 및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백권호 편.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 소통과 성장』. 서울: 폴리테이아. pp. 21-60.
- 동북아역사재단. 2010. 「한중일 역사인식 여론조사 결과」(11월 9일).
- 동아시아연구원. 2008. 「BBC·EAI 국제현안조사 2008년 4차 발표」. <http://www.eai.or.kr>(검색일: 2008년 5월 22일).
- 문홍호. 2009.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의 대북인식과 정책: 변화와 지속」. 『중소연구』 제33권 제2호. pp. 15-44.
- 서진영. 2006.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서울: 폴리테이아.
- 손열. 2010. 「21세기 일본의 동맹전략: 권력이동, 변환, 재균형」. 하영선 편.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서울: EAI. pp. 169-203.
- 신상진. 2006. 「중국의 대 북한 인식변화 연구: 북한전문가 심층 면담조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pp. 265-291.
- 외교통상부. 2010. 『중국개황 2010년』.
- 원동욱·김재관. 2010.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현대중국연구』 제12집 제1호. pp. 31-63.
- 윤경우. 2008/2009. 「중국의 한류 수용양상: 선택적 수용, 저항 그리고 변용 및 주변화」. 『중소연구』 제32권 제4호. pp. 99-129.
- 이동률. 2006. 「한·중 정치관계의 쟁점과 과제」. 전성홍·이종화 편.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중 관계에의 함의』. 서울: 오름. pp. 227-277.
- 이장원·홍우택. 2008. 「중국의 문화적 팽창주의: 동북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의도 분석」. 『국제정치논총』 48권 2호. pp. 33-52.
- 이희욱. 2009. 「북·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이장규 외.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I』.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79-218.



- 이희옥. 2008. 「역사문제와 한·중 관계: 동북공정을 중심으로」. 전성홍·이종화 편.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중 관계에의 함의』. 서울: 오름. pp. 303-338.
- 이희옥. 2006. 「중국의 대북한정책 변화의 함의: 동북 4성론 논의를 포함하여」. 『현대중국연구』 제8집 제1호. pp. 75-107.
- 조명철. 2010.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 변화와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KIEP) 10(38)(12월 28일).
- 조영남. 2010a.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중소연구』 제34권 제2호. pp. 41-68.
- 조영남. 2010b. 「한·중 관계의 발전과 규범 충돌: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2호. pp. 167-191.
- 조영남. 2009a.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
- 조영남. 2009b.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치·외교 분야 대(對) 중국 국가전략 총괄연구」. 이장규 외.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I』.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3-71.
- 조영남. 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파주: 나남.
- 최명해. 2010.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 『JPL정책포럼』(제주평화연구원) 2010~22(8월).
- 최영중. 2009. 「지역제도와 중견국가」. 『국제관계연구』 14집 2호. pp. 63-90.
- 하도형. 2008. 「한·중 국방교류의 확대와 제한요인에 대한 연구」. 『현대중국연구』 제9집 제2호. pp. 3-35.
- 형혁규. 2008/2009. 「한·중 관계의 담론적 유의미성」. 『중소연구』 제32권 제4호. pp. 43-69.
- 「‘中國人看世界’輿論調查: 國人國家自豪感回歸正常」. 『環球時報』(인터넷판) 2011년 1월 2일. <http://world.huanqiu.com>(검색일: 2011년 1월 4일).
- 楊潔篪. 2011. 「推進新時期中美關係的國事訪問」. 『人民網』 1월 9일. <http://world.people.com.cn>(검색일: 2011년 1월 10일).
- 胡正躍. 2011. 「2010年中國周邊外交」. 『人民網』 1월 17일. <http://world.people.com.cn>(검색일: 2011년 1월 17일).
- “Japan and South Korea hold first military talks in nearly two years.” *Washington Post*. January 10. 2011. <http://www.washingtonpost.com>(검색일: 2011년 1월 11일).
- Cha, Victor D. 1999. “Engaging China: The View from Korea.”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bert S. Ross (eds.).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Emerging Power*. London: Routledge. pp. 32-56.
- Chung, Jae Ho. 2009. “South Korea’s Evolving Relations with a Rising China: Symbiosis or Mere Cohabitation?” Shiping Tang, Mingjiang Li, and Amitav Acharya (eds). *Living with China: Regional States and China through Crises and Turning Point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 211-227.
- Chung, Jae Ho. 2007.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ronin, Patrick M., Daniel M. Kliman and Abraham M. Denmark. 2010. *Renewal: Revitalizing the U.S.-Japan Alliance*.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 Denmark, Abraham M. and Zachary M. Hosford. 2010. *Securing South Korea: A Strategic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December.
- Kim, Tae-Hyo. 2008. "Korea's Strategic Thoughts toward Japan: Searching for a Democratic Alliance in the Past-driven Futur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2). pp. 141-154.
- Lee, Chae-Jin. 1996.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 Lee, Heeok. 2010. "China's Policy toward (South) Korea: objectives of and obstacles to the strategic partnership."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2(3). pp. 282-301.
- Study Group on the Future of the Japan-U.S. Alliance. 2010. *Renewing Old Promises and Exploring New Frontiers: The Japan-U.S. Alliance and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Tokyo Foundation and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 Thompson, Drew. 2011. *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A U.S.-Korea Institute at SAIS Report).

## Developmental Trends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and Its Prospect: A Proposal of South Korea's China Policy

Young Nam Cho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past two decades' development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and its prospect, with a purpose of proposing a South Korea's China policy. To this end, it firstly investigates the evolving trends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Then, it delves into major contentious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olitical, military and security, and social areas. Based on these analyses, South Korea's China policy is presented. Since the 1992 diplomatic normalization, Sino-South Korean relations have witnessed four distinctive trends: first, rapid increases of agents and area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acceleration of uneven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third, the increasing disparity between official descriptions and their actual relations; fourth, increase of the asymme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state capabilities. In addition, Sino-South Korean relations will face challenges in the future pertaining to three issues, such as Sino-North Korean alliance and North Korean problems, U.S.-South Korean alliance and its preparation for China's rise, and conflicts or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norms and values. Finally, to achieve a more solid development of the Sino-South 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South Korea needs to pursue a 'policy trio' toward China, composed of engagement policy, hedging strategy, and East Asian multilateral policy. In this policy trio, South-North Korean relations are the center of gravity,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all three policies. This relationship also seriously affects whether the three individual policies are implemented well or not.

Key Words: Sino-South Korean relations, South-North Korean relations, Sino-North Korean alliance, U.S.-South Korean alliance, engagement policy, hedging strategy, multilateralism, policy trio



